

문대통령 “3기 신도시 내 토지가래 전수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가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명 신도

“신도시 내 국토·LH 가족·근무자 조사” 지시
 “총리실 지휘...위법사항시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
 “산하기관·자회사 등...전직자 등 범위 확대될 수도”

시 투기 의혹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집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 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아울러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조사를 총리실이 지휘하도록

지시한 이유에 대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감사원과 (정부) 합동으로 (조사를)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며 “우선 총리실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하고, 감사원이 추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리께서 어제 (광명, 시흥 등 해당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

시했는데, 대통령은 (조사 대상 지역을) 3기 전체로 확대 지시하고 조사 대상 범위도 넓히도록 지시했다”며 “철저히 진상규명해 투기를 엄단한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하기관, 자회사 등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전직 근무자까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하다가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핵심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사장 재직시절 투기 의혹이 발생한 데 대해 “변 장관에게 해서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하고, 감사원이 추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검수완박은 부패완관...헌법정신도 위배”

윤석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 위해 대구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은 ‘부패완관’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고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 수사청(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는 취지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정치·경제·사회 제반에 있어서 부정 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관치해 하는 부패완관이다”면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당이 수사청 법안을 강행할 경우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질문에 “지금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수사청 추진에 맞서 검사장회의 등을 소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검토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총장을 거당해 ‘자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관해서는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대구고검·지검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수사청 설치 등 각종 현안과 관련된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당부 사항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참석자들 일부와 만찬 자리가 예정돼 있다.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여수·순천·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3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2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안건이 밀린 데다 시간이 부족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6개 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인 제주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월 26일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남 동부권 역사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는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법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속해서 건의하고 촉구해왔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은 빛을 보지 못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지역민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한명숙 사건 배제 내 손 떠날 줄 알았다”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검찰총장 윤석열”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윤 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의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임 연구관의 주장 뒤에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해명한 데 다시 반박 글을 올린 것이다. 대검은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더라도, 주임검사가 아니었던 만큼 직무배제나 직무이전 조치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날 처음으로 대검 검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이날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아됐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뜻 달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與 재보궐 선대위 체제로 전환...이낙연·김태년 위원장

최고위서 중앙선대위 구성안 의결
공동선대위원장 최고위원 포함 11명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당 조직을 4·7 재보궐선거 대응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이낙연 대표가 밝혔다. 중앙선대위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서울 선대위원장인 선거지원단장인 기동민·박정 의원, 부산 선대위원장인 선거

지원단장인 박재호·김정호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연대단장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로 꾸려졌다. 김진표·변재일·설훈·송영길·안민석·이상민·조정식·김상희·김영주·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홍영표 의원이 선임됐다. 고문단장에는 이석현 의원, 선거대책본부장에는 박광운 사무총장, 정책비전본부장에는 홍의표 정책위의장, 종합상황실장 겸 전략본부장에는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의원선거지원본부장에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특보 단장에는 이계호 의

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 선대위에는 김희재 법률지원실장, 맹성규 총무본부장, 김철민 조직본부장, 박수현 홍보본부장, 김주영 노동본부장, 전해숙 직능본부장, 정준숙 여성본부장, 장경태 청년본부장, 서영교 유세본부장, 조한기 기차뉴스대책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제가 책임을 맡고 거당적으로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당은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모든 역량을 후보 지원과 지역발전 공약 수립 등 선거지원에 총동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당원 모두가 남은 35일 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뉴스1

민주당 당권주자들,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 경쟁 주목

홍영표 5일 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 간담회 후 기자회견
의원식 “군공항 이전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 잇단 공약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담보 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해법찾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교착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풀릴 듯이 주목된다. 3일 국회와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9일 사퇴예정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이을 당권주자 중 한명인 홍영표 의원(4선)은 오는 5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홍 의원은 특히 5일 오전 광주 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의견 청취와 함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국회에서 잇따라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기존 ‘기부대 양여 전제’ 지자 해협’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이전을 위한 노력을 해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방부 중심의 광주-전남 동반성장 방안, 즉 양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서울에서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문

정 총리 “尹 소신 밝히려면 직 내려놔야”

“尹, 자중...이집과 소영웅주의로 개혁 수행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등에 반발한 것을 두고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으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엄정한 법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냐”고 직격했다. 특히 윤 총장이 ‘직을 걸어서라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막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



동”이라며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라며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앞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라며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성운 지검장 등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 이첩

이규원 검사 건과 함께 이첩

검찰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금지 사건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다. 수원지검 이정설 형사3부장 수사팀은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

력부 부장으로 있던 중 이 사건 최초 수사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세 번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앞선 2차례 소환조사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3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는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호매민평 이태헌

누구를위하여

아내려나 얘기냐??

누구쪽으라고 우쭐

여당 중수장

이당

태헌